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2010년 6월에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1년 2월에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중 2009년 11월에 시행했던 긴급 운영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호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가. 사업추진 경과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과 북한 간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 간 그리고 당국 간 협의를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이 착수되었고, 2007년에는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완공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를 개원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11월과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잠정적인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말 기준 북한 근로자는 총 4만 9,866명이고, 누적 총생산액은 15억 649만 달러이다.

2010년 7월 ~ 2011년 12월 주요추진 사항

일 자	추진 내용
2010년 9월 1일	개성공단 탁아소 개원
2010년 9월 1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0년 11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잠정 출경차단 조치 시행
2010년 12월 20일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당일 잠정 출경차단 조치 시행
2011년 04월 04일	개성공단 체류인원 점진적 확대조정 조치

나. 입주기업

2004년 6월 14일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8개사가 입주한 이래,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3개사가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업종분포는 섬유 72개사, 기계 금속 23개사, 전기전자 13개사, 화학 9개사, 종이목재 3개사, 식품 2개사, 비금속광물 1개사 순이다.

기업 입주 추이

(단위 : 개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업체수	18	30	65	93	117	121	123

입주기업 생산업종 분포

(단위 : 개사)

구 분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종이목재	식품	비금속광물	계
업체수	72	23	13	9	3	2	1	123

입주기업의 증가와 함께 2008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의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던 북한 근로자는 2009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근로자는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가 55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북한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수	17,621	11,189	22,538	38,931	42,561	46,284	48,206

다. 생산 현황

2010년도 생산액은 3억 2천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개성공단 내 누적 생산총액은 2007년 1월 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8년 11월 5억 달러, 2010년 9월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를 달성하고 있다

2010년 1월에서 2011년 12월 말까지의 업종별 생산액은 섬유 3억 9,491만 달러, 화학 6,072만 달러, 기계금속 1억 125만 달러, 전기전자 1억 5,636만 달러, 식품 6,855만 달러, 종이목재 3,039만 달러, 기타 2,016만 달러였다.

업종별 생산액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섬 유	6,780	27,793	85,543	132,179	152,050	179,235	215,988	799,568
화 학	1,768	10,900	18,262	21,785	26,179	32,092	21,995	132,981
기계금속	5,250	20,853	41,947	49,250	37,312	48,637	52,140	255,389
전기전자	1,108	14,191	39,027	47,162	37,584	59,147	102,774	300,993
식 품	-	-	-	976	2,003	2,668	4,187	9,834
종이목재	-	-	-	70	1,313	1,469	1,506	4,358
기 타	-	-	-	-	34	75	1,941	2,050
계	14,906	73,737	184,779	251,422	256,475	323,323	401,848	1,506,490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2007년 10월까지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을 완공하였다. 2011년 6월 기준 용수공급용량 3만 톤/일, 폐수종말처리용량 1만 5천 톤/일, 폐기물매립용량 6만 1,000m³, 폐기물소각용량 12톤/일 등의 기반시설과 전력시설용량 10만 kW용량을 구축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12월 2차 소각시설(50톤/일)의 건설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북한에 의한 공단 통행차단 등 이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로 착공이 유보된 상태이다.

통신시설은 KT가 2005년 12월 303회선을 개통한 이래 2009년 12월 600회선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회선을 확보하였다. 지속적인 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2010년 7월부터는 신규전화 개통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입주기업의 통신이용 불편 완화에 노력하였다. 향후 국내 환경과 동등한 수준의 통신 공급을 위해 1만 회선 규모의 통신센터 건립, 인터넷·이동전화 개통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시설로는 2007년 기술교육센터가 준공되었으며, 2009년에는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연건평 2,181㎡, 소방차량 8대 규모의 소방서 건립을 착수하여 2010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에는 소방차 5대를 구입·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소방서 건물공사는 남북관계 상황으로 유보되어 있다. 2010년 9월에는 개성공단 탁아소를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응급의료병원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2007년 8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된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지하 1층, 연면적 3만 784㎡ 규모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공공기관의 업무시설, 은행 등의 편의시설, 공단 홍보관 및 제품전시·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기술교육센터



종합지원센터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가. 법과 제도

개성공단에는 남북 간 합의서, 남측 법규, 북한 법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이 협력해 나가는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기타 남북 간 합의서가 개성공단에 적용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우리측 법규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지원을 비롯해 개성공

업지구에 대한 투자나 출입·체류하는 우리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제도의 혜택을 개성공단 현지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법률 외에도 개성공단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 법규는 2002년 11월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등 16개의 하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행세칙의 제정은 남북이 협력하는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는 10여 개의 시행세칙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2011년 12월 기준으로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등 50개의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남북 간 합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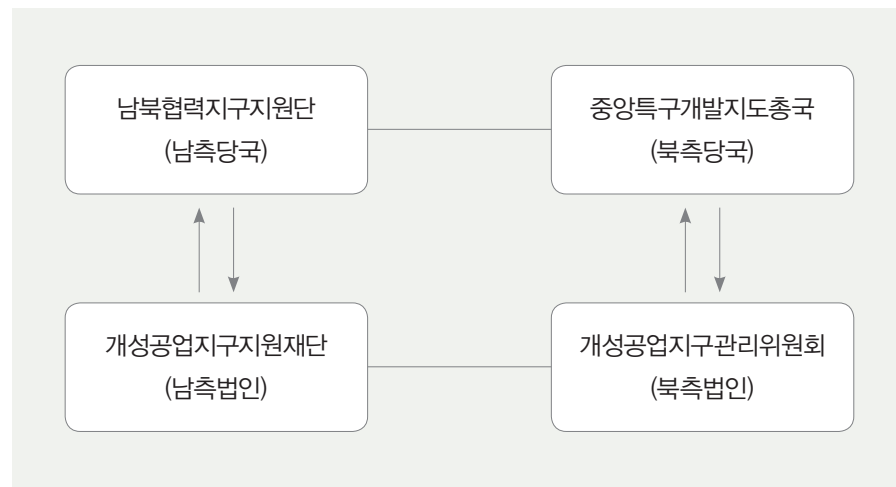
구 분	남북간 합의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기타 관련 합의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나. 사업지원체계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측의 남북협력지구지원단과 북한당국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되고 있다.

2004년 10월 공단관리와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회가 공단 내에 설립되었으며, 5부 1팀(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기술교육부, 법질서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남측에서는 2007년 12월 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및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설립되었으며, 1부 2팀 1사무소(기획법제부, 예산회계팀, 출입지원팀, 도라산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위원회는 북측법인이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겸임하고, 직원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파견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지원체계



5. 기업 투자 지원

가. 금융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초기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8억 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82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 제도는 2007년 12월부터 기술보증, 신용보증제도로 대출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 44개 사에 대해 290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후발진출기업에게 60억 원 한도 내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1개 업체에 약 35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고 생산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8년 12월 1일 북한이 취한 통행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기업의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2009년 1월과 11월에 각각 6개월, 2010년 11월에 12개월 연장하였다.

한편, 북한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박탈 등에 따른 사업 중단조치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경험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북한에 의한 통행차단조치 등으로 개성공단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2008년 말 이후 가입업체가 늘어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146개의 개성공단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액은 5,07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

년 7월 기업당 약정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지급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2009년에 시행한 경험보험 보장한도 확대, 지급요건 완화,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은 통행차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생산 활동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2009년 8월에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으로 주문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역보험제도(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를 도입함으로써 입주기업이 원부자재 거래 중단과 납품 중단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투자와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판로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2007년 4월 2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 타결에 이어, 2011년 7월 1일에는 EU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발효 1년 후에 설치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입주기업들의 전시회 및 판매전 참가를 지원하였다. 2010년 5월 「공동브랜드활용 제품전시상담회」 및 2011년 3월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전」

에 입주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고, 2010년 10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9차 한상대회」 참가, 그리고 2010년 12월 국회 의원회관 「개성공단제품 전시판매전」 등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개성공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에 개발한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PEACEWORKS'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하철 홍보, 홍보명함 제작, 전시판매전 행사장 내 배너 게시 등의 홍보활동도 추진하였다.

다. 보건의료 지원

개성공단 내 의료시설로는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이 있다. 동 병원은 2007년 4월 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과 북한의 종합진료소를 하나의 건물에 통합하여 개원하였다. 이 협력병원에서는 남북한 진료소를 구분하여 각각 자기측 근로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수술실·방사선실·검사실·초음파실 등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협력병원의 의료진은 우리측 5명과 순환진료진, 그리고 북한측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협력병원에서 진료 받은 북한 근로자는 총 7만 6,676명으로 산부인과 38.7%, 내과 31.9%, 외과 24.6% 순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단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 건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닥터스 진료 실적

(단위 : 명)

구 분	남 측	북 측	전 체
2005년	5,362	807	6,169
2006년	5,834	1,398	7,232
2007년	7,647	35,766	43,413
2008년	7,751	61,973	69,724
2009년	5,803	72,205	78,008
2010년	4,115	40,275	44,390
2011년	4,707	36,200	40,907

라. 근로조건 개선

북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기본노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가급금과 장려금 및 상금으로 구성된다. 월 최저노임은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합의로 결정하되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50달러에서 시작하여 2007년 8월 1일 52.5달러, 2008년 8월 1일 55.125달러, 2009년 8월 1일 57.881달러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2010년 8월 1일부터는 60.775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규정」에 따라 노동보수 이외에 월 노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1년 북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월평균 110달러 수준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말 기준 245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샤워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이 센터는 22개의 강의·실습실 등을 갖추고 1일 약 700여 명에 대한 동시교육이 가능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위한 맞춤형 교육과 남측 근로자의 자기개발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기술교육 센터와 함께 2006년부터 추진된 개성공단 내 북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가 남북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2009년 10월 착공, 12월에 완공되었다. 탁아소 운영에 대한 남북 간 협의를 거쳐 2010년 9월 1일 개원·운영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탁아소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로 인해 2010년 5월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기존 사회문화교류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한 최소한의 간접 접촉만 허용하였으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5.24조치」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하반기부터 종교·예술·학술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방북을 승인했다.

1. 종교계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8.15 경축사를 계기로 시작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종교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공론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교계는 순수 종교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함으로써 2011년 하반기에는 남북 종교교류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정부는 종단별 형평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서 순수 종교교류 차원의 방북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였다.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북한 「조선종교인협회」의 초청으로 2011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종교인 공동 기도회를 개최하고 종교 교류 관련 협의를 하였다.

불교계의 경우 조계종에서 2011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보현사(묘향산)를 방문하여 「팔만대장경 판각 1천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고불법회(古佛法會)를 개최하였고, 10월 13일에는 신계사(금강산)에서 낙성 4주년 기념 법회를 개최하였다. 천태종에서는 10월 31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

천 910주기 열반 다례제'를 개최하였다.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1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남북 공동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카톨릭교회와 '2012 장충성당 건립 25주년 행사' 및 장충성당 보수 등 종교교류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천도교에서도 2011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합동 시일식을 봉행하였고,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11월 1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 민족종교 간 교류문제를 논의하였다.

2. 문화예술 및 학술 분야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2011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 관계자와 남북합동교향악단의 서울-평양 교환 연주 및 북한 음악가 발굴·육성 사업에 관해 논의하였다.

학술분야에서는 「5.24조치」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과 관련해서도 2011년 10월 28일 남북이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발굴터 복구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만월대 발굴 부지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토 및 배수로 정비, 축대 보강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질화 되어가고 있는 남북 언어를 수록한 단일 사전 편찬을 위해 2005년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5.24조치」 이후 남북이 각

각 사전 집필 및 새 어휘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남북이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공동편찬회의 재개 및 편찬자료 교환 등을 논의하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 13만 개의 새 어휘 발굴, 38만 개의 1차 올림말을 선정하는 등 전체 공정의 약 63%를 진행하였다.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 방북 시 북한음악단 공연 지도



개성 만월대 피해지역 복구작업

3.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2001년부터 남북 공동으로 진행된 6.15 공동행사의 경우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2009년부터 남북이 각각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2011년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단독으로 6.15 기념행사를 추진하였다. 남측위는 6월 12일 보신각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 한마당」을 개최하였고, 6월 15일에는 임진각에서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간 대북교류는 장기적 차원의 교류 내실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지자체 간 대북교류 사업의 정보공유 및 중복방지, 중앙과 지방 간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06년도부터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2010년 하반기 실무협의회는 11월 5일 16개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렸고, 2011년 실무협의회는 북중 접경지역 답사 및 북중관계 세미나 형식으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4. 김정일 위원장 사망 조문단 방북 및 조의문 발송

2011년 12월 19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발표 이후 정부는 12월 20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한해 북한의 조문에 대한 답례 형식의 방북 조문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인 이희호 여사와 고 정몽헌 회장 유족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가족 및 수행원 포함 18명)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북하여 12월 26일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을 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76개의 민간단체가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조의문을 발송하였다.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1. 남북출입사무소 역할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을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된 '육로출입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남북 간에 철도·도로가 연결되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됨에 따라 남북출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03년 2월부터는 임시 출입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3년 11월 20일 남북출입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북한을 방문하는 출입인원에 대한 심사·검역 등의 통행관리, 출입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 반출입 물자의 통관 지원, 열차 운행과 관련한 대북연락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의 최북단이자 남북 간 길목에서 통일부를 비롯하여 법무부·관세청·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문화재청 등의 출입심사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개성공단

과 금강산 등 북한 내 남북협력지구로의 출입과정에서 관문(關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남북 출입통행 절차

정부는 남북관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 간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출입에 있어서도 동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왕래 시 출입경 개념을 도입하여 출국 대신 출경으로, 입국 대신 입경으로, 사무소 명칭도 출입국사무소 대신 출입사무소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북왕래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도 외국으로 출국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여권을 소지하여 출국심사를 하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북승인을 받고 여권 대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만 출입심사, 통관, 검역 등의 절차는 출입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출입국·출입경 차이

구 분	출 입 국	출 입 경
차이점	·국가 간의 왕래, 국제거래 ·비자발급, 여권소지 ·출입국사무소 관할(법무부)	·특수관계인 남북 간 왕래, 민족내부거래 ·출입증, 체류증 발급 북한방문증명서 소지 ·남북출입사무소 관할(통일부)
공통점	·출입심사, 통관절차, 보건검역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여 방북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개성

공단 방문 시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OK시스템(Online 출입신청시스템)에 방북 시 필요한 증명서인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신청하고, 동행계획을 작성하여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입 신청 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에서 방북승인을 확인하고, 출경 당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방문증명서를 제시하고 출경 심사를 받아 출경한다. 북한에서는 출입증 또는 체류증을 제시하여 출입심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방북승인을 신청할 때 방북안 내교육과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하여 방북하려면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후 동행계획 제출 전에 차량운행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자동차 운행신청 시 「전자운행증(RFID카드)」이 발급되어 출입경시 전자식 자동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출입경 차량 전면 「전자운행증(RFID카드)」을 부착하면 차량심사대를 신속·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다.

북한(개성공단)방문신청 개요



3. 출입시설 및 출입·운송 현황

가. 출입시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후,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출입시설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남북 간 인원·차량·물자(화물) 왕래 시 수반되는 통행심사·통관검사·검역검사 등 출·입경업무 전반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확립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개성·평양 등 서부지역 출입장소로 경기도 문산에 경의선 도로와 철도출입사무소를, 금강산 등 동부지역 출입장소로 강원도 고성에 동해선 도로와 철도출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의선출입사무소의 철도·도로출입시설(도라산역 포함) 및 동해선출입사무소의 철도·도로출입시설(제진역 포함)은 2006년 준공하였으며, 경의선의 도라산물류센터는 2007년 12월, 동해선 물류센터는 2010년 9월 준공하였다. 현재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출입사무소와 동해선출입사무소를 포함한 총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67만 5,988㎡이며, 건물은 51동 8만 6,424㎡이다.

경기도 문산에 소재하는 경의선출입사무소는 차량·인원의 출입통행을 위해 도로출입시설, 남북 열차운행을 위한 철도출입시설, 남북 간 이동하는 물자(화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검역 및 북한의 부족한 물류인프라를 보완하고자 도라산물류센터를 건설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은 44만 2,015㎡이고, 건물은 39동 5만 3,623㎡이다.

강원도 고성에 소재하는 동해선출입사무소에는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 및 물류센터를 건설하였으며, 부지면적은 23만 3,973㎡, 건물은 12동 3만 2,801㎡이다.

출입시설 현황

구 분		건물 연면적	공사기간	부지면적/동수
경의선출입사무소 (문산)	철도출입시설	13동 15,825㎡	'04.9 ~ '06.4	442,015㎡ (총 39개동)
	도로출입시설	1동 18,310㎡	'04.9 ~ '06.5	
	물류센터	25동 19,488㎡	'05.10 ~ '07.12	
동해선출입사무소 (고성)	철도출입시설	3동 6,705㎡	'04.9 ~ '06.4	233,973㎡ (총 12개동)
	도로출입시설	1동 14,055㎡	'04.9 ~ '06.5	
	물류센터	8동 12,041㎡	'06.12 ~ '10.9	

경의선출입사무소 전경



철도출입시설(도라산역)



물류센터

동해선출입사무소 전경



철도출입시설(제진역)



물류센터

나. 육로를 통한 출입통행 현황

2010년도 남북 출입통행은 정부의 「5.24조치」와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정부의 체류인원 축소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경의선 육로로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감소에 따라 출퇴근 인원이 증가하여 12만 6,107명의 인원과 8만 1,414대의 차량이 통행하였다. 동해선 육로는 북한의 자산동결·물수·관리인원 추방 조치 등으로 통행인원 3,051명, 통행차량 1,027대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11년도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체류인원의 증가로 출퇴근 인원이 감소하여 통행인원과 차량이 전년대보다 소 감소한 11만 5,249명의 인원과 8만 1,414대의 차량이 통행하였다. 동해선 육로는 8월 23일 금강산 지역 관리인원 16명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전년대보다 감소한 436명의 인원과 198대의 차량이 통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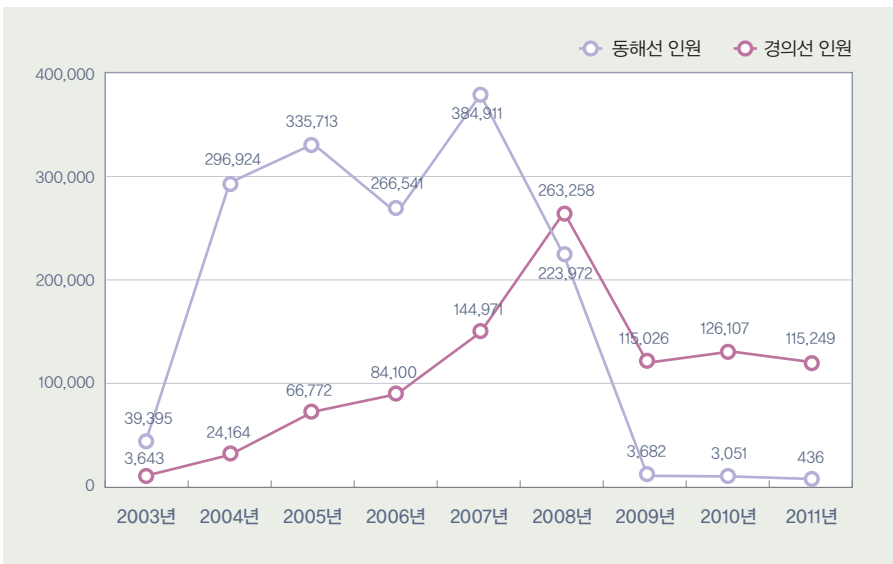
경의선의 경우,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가 남북출입사무소와 개성에서 개최되어 출입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9월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방문, 12월 26일 ~ 27일 이회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민간조문단 일행이 출입하였다. 또한 북한의 취약계층·영유아 지원 등을 위한 인도지원 단체도 통행하였다.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 13주년 기념 행사, 동계시설물 점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소규모로 출입이 이루어졌다.

경의선 및 동해선 출경 인원·차량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 계
경의선 육로	인원(명)	3,643	24,164	66,772	84,100	144,971	263,258	115,026	126,107	115,249	943,290
	차량 (대)	1,249	15,314	38,868	47,352	71,857	91,309	72,929	83,308	81,414	503,600
동해선 육로	인원(명)	39,395	296,924	335,713	266,541	384,911	223,972	3,682	3,051	436	1,554,625
	차량 (대)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1,323	1,027	198	88,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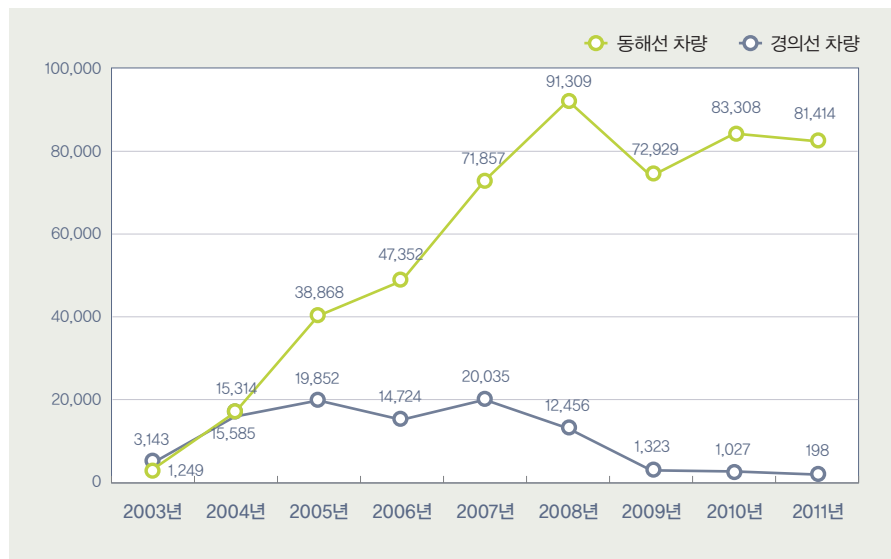
출경인원 변동 추세

(단위 : 명)



출경차량 변동 추세

(단위: 대)



또한 남북출입사무소는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하여 통일안보 현장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0년도에는 3,834명의 방문객이 내방하였고, 2011년도에는 6,062명이 방문하였으며 방문객은 증가추세에 있다.

다. 남북화물열차 운행

2005년 12월 말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진~금강산, 25.5km)의 남북 간 연결철도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 간에 남북 화물열차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정기적(오전 9시에 도라산

역 출발,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 출발)으로 운행하였다.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해 운행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는 경우에만 화차를 운행하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화물열차는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화물열차 운행기간 중 총 222회(왕복 444회)에 걸쳐 17회 31량 318톤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 중 남측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에서 남측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는 7량 75톤으로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였다.

라. 해상운송

정부의 「5.24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고, 북한측도 우리 선박의 북한 해역 운항을 금지시키면서, 2010년 남북 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1,432회로 2009년 대비 44.4%가 감소하였다. 2010년 6월부터는 우리 교역업체의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유예기간(2010년 6월 ~ 2011년 2월) 동안 교역물자 반출입을 허용하면서, 이들 물자수송을 위한 제3국 선박의 운항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송물자는 북한산 농림수산물과 의류 임가공 제품이었으며, 2010년 6월 ~ 12월까지 총 174회 운항하였다.

2011년은 남북교역 중단 등으로 선박은 전년 동기 1,432회보다 90.1% 감소한 142회 운항하였으며, 의류임가공 제품의 잔량과 대북 지원물자 수송을 위해 운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3국적선이 우리 항구를 단순 경유하여 남북 간을 운항하였다.

남북 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94~'04	'05	'06	'07	'08	'09	'10	'11
횟수(편도)	13,131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마. 항공운송

「5.24조치」 등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적항공기 운항은 없었다. 다만, 2011년 4월 초에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일행이 북한 평양을 경유하여 남한을 방문하였고, 4월 말에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포함한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이 북한 평양을 경유하여 남한을 방문하면서, 2011년에는 제3국적 항공기가 남북 사이에 2회 운항하였다.

남북 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횟수 (편도)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2

제5절 남북 협력기금 관리·운영

1. 남북협력기금 수입

남북협력기금 수입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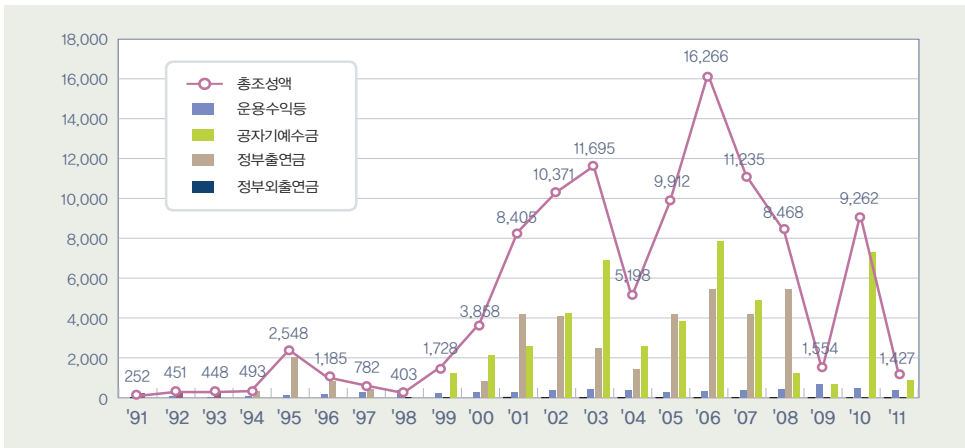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계 획	수 입	계 획	수 입
정부출연금	3,500	-	3,500	-
공공자금 예수금	9,629	8,750	1,111	1,044
여유자금 회수	8,531	10,042	8,449	9,336
자체수입	617	741	709	570
합 계	22,279	19,533	13,768	10,950

2010년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은 총 2조 2,279억 원으로, 2010년 말 기준 1조 9,533억 원이 수납되었다. 정부출연금은 3,5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009년부터 정부출연금 배정방식이 수시배정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10년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낮음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정부출연금 3,500억 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9,629억 원(남북협력 679억 원, 경수로 8,950억 원)으로 계획하였고, 이 중 8,750억 원(경수로)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 회수는 8,531억 원(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441억 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9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조 42억 원(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7,833억 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209억 원)이 수납되었다. 자체수입은 617억 원으로 계획하였고, 741억 원이 수납되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총 1조 3,768억 원으로, 2011년 말 기준 1조 950억 원이 수납되었다. 2011년도에도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낮아 당초 계획된 정부출연금 3,500억 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1,111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44억 원이 수납되었다. 여유자금 회수는 8,449억 원(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914억 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53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9,336억 원(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030억 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306억 원)이 수납되었다. 그 외 자체수입으로는 709억 원을 계획하였고, 570억 원이 수납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

(단위 : 억 원)



2. 남북협력기금 지출

남북협력기금 지출

(단위 :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계 획	지 출	계 획	지 출
사업비	사회문화 교류	88	88	26
	인도적 문제해결	7,159	6,139	103
	남북 경제협력	2,836	2,996	179
	개성공단	1,106	930	119
	소 계	11,189	10,153	427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9,671	1,271	1,086
여유자금 운용		1,385	2,288	9,410
기금운영비		34	56	27
합 계		22,279	13,768	10,950

2010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1,189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9,671억 원(남북협력 683억 원, 경수로 8,988억 원), 여유자금 운용 1,385억 원, 기금운영비 3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10년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1,189억 원 중 863억 원이 집행(사업비 대비 집행률 7.7%)되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으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19억 원,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2억 원 등 21억 원이 집행되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측에서의 집필, 새 어휘 조사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계속 지원하여 전체 공정의 약 56%가 진행되었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은 '건덕전 지구'(약 3,300m²)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다.

인도적 문제해결 지원은 2010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5억 원,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4억 원,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 171억 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21억 원 등 총 212억 원이 집행되었다.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에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은 무상지원 81억 원, 교역·경협자금대출 416억 원 등 총 497억 원이 집행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및 통일재원 공론화를 제안한 이후 통일준비에 대한 여론과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5.24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여 대출을 시행하고,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였다.

개성공단 지원사업에는 개성공단 기반조성 96억 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37억 원 등 총 133억 원이 집행되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산활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생산활동 유지 및 기업의 경영애로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사업비 이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9,305억 원(남북협력 557억 원, 경수로 8,748억 원), 여유자금 운용 9,336억 원, 기금관리비 29억 원 등이 집행되었다.

2011년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153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

환 1,271억 원(남북협력 38억 원, 경수로 1,233억 원), 여유자금 운용 2,288억 원, 기금관리비 56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1년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153억 원 중 427억 원이 집행(사업비 대비 집행률 4.2%)되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으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23억 원,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2억 원 등 26억 원이 집행되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전체 공정의 약 63%를 진행하는 등 남북의 언어 및 사회현실을 서로 이해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종교인평화회의(KCRP) 방북 지원 등 비정치적인 학술종교문화를 진행하는 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인도적 문제해결 지원은 대북 수해피해 지원 36억 원,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65억 원 등에 103억 원이 집행되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북한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5.24조치」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사업도 재개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백신·의약품·영양개선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은 무상지원 60억 원, 교역·경협자금대출 75억 원 등 총 179억 원이 집행되었다.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지원을 결정하였고,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조치들은 경협기업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 교류협력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 지원사업에는 개성공단 기반조성 64억 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55억 원 등 총 11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기금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사업비 이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1,086억 원(남북협력 34억 원, 경수로 1,052억 원), 여유자금 운용 9,410억 원, 기금관리비 27억 원 등이 집행되었다.

3. 통일재원 법제화 추진

1990년에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고 20여 년이 흘렀으며, 기본적인 법률의 골격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분야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상당히 발전되었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2005년 12월, 2010년 9월) 등을 통해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왔다. 남북관계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하위규정인 시행령 개정 방식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해 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였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기능 및 역할 확대에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었다.

2010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통일재원 법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김충환 의원 대표 발의안, 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안, 송민순 의원 대표 발의안), 「통일세법」 제정안(김충환 의원 대표 발의안) 등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이 통일 이후 남북협력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혀나가고, 통일재원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정부입장을 반영하기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일재원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계정을 신설하고, 민간출연금·정부출연남북협력계정 불용액 등을 통일계정에 적립한다는 것이다. 남북협력계정은 통일 이전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통일계정은 통일 이후 남북 간 통합과 사회 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듯 통일재원 법제화 추진은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세대의 통일비용 분담을 통해 미래 통일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출연금과 같은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를 통해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그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